

### 연구원 소식

#### 53차 문화강좌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연구원 문화강좌가 다시 대면 강좌로 회원과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2년 12월 10일(토) 16시 30분 ~ 18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제목:** <한국영화가 낳은 여배우의 향기와 전망>

**강사:** 이정욱(영화감독)

**대상:** 회원 및 시민

장소 관계상 스물 다섯분 내외만 모실 수 있으니 참석하실 분들의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화 강좌 뒤 2022년 송년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동아리 지원사업 활동 보고: 대청호 오백리길 걷기 >

- 대청호 둘레길 3구간 걷기 -

○ 일 시 : 2022. 11. 25(금) 16:00 ~ 26(토) 15:30

○ 참석자 : 회원 5명(유영봉, 박해숙, 변주승, 박애스더, 황일진)

○ 활동내용

- 11. 25(금) 옥천군 금강변 별장에서 일박 후 11. 26(토) 9시경 출발, 대청호 오백리길 4구간 호반낭만길(마산동 윗말뚝~신상교) 12.5 Km를 걷고 종점 도착 후 해산



## 국가비상사태 선언 - 1971년 12월 6일

### #1.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에 대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었다. 1963년, 1967년에 연거푸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헌법상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경제건설의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안정의 극대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는 이유를 들어 "삼선 개헌" 논의를 공식화 시켰다. 국민은 장기집권 기도를 저지하는 개헌반대 여론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대한반공연맹·대한재향군인회·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한기독교연합회·제헌국회의원일동 등 50여 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오늘 대통령 하야반대를 외치는 단체와의 묘한 기시감). 결국 1969년 9월 14일 여당계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헌안과 국민투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2.

1971년 4월 27일 7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예비군 폐지·노자공동위원회 구성·비정치적 남북교류·4대국 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박정희 정권의 안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의 허구성을 정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대중의 선풍적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종신 총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고 폭로하며 선거에 나섰는데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감정" 으로 맞섰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최규하는 "김대중 후보의 언론체육인 등의 남북교류, 4대국 안전보장, 예비군제 폐지 등의 공약을 북한이 지지했다" 라고 발표했고 국회의장 이효상은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런 후손이다. 이제 그를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년 만년의 임금으로 모시자" 고 외쳤다. 결국 "이번이 마지막"(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조언한 읍소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출마한 박정희는 이 선거에서 총투표의 51.2%(유효투표의 53.2%)를 획득, 43.6%(유효투표의 45.3%)를 얻은 김대중을 95만 표차로 따돌렸으나, 부정·불법·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대중은 전체 도시표의 51.5%, 서울에서 58%의 득표율을 보여 박정희의 39%에 비해 도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김대중의 예언대로 이후 16년 동안 국민직접투표 없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

### #3.

삼선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불법을 동원했음에도 근근이 당선된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표면적 이유로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변, 그 틈을 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들었다. 박정희는 담화를 통해 “이것(민주체제)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며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현행 헌법 위반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공화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부역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감). 이 법안은 경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과 언론·출판, 집회·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상 두 기본권을 봉쇄해 버렸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며 초헌법적으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1년이 채 안되어 10월 유신이라는 또 다른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마치고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2,359명 투표에 2,357명 찬성, 무효 2명으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는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그의 딸인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많은 일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임기를 마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민인들의 마음을 잃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길로 접어들었는지 기억한다면 겸허히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 죄과를 씻는 길이 자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을 깨닫길 빌어본다.

### #4.

1971년 12월 6일, 대통령은 국가비상조치를 선포했다.